

2022년 호주 총선 결과와 새 정부의 정책 전망

조승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jcho@kiep.go.kr, 044-414-1248)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044-414-1245)



차 례

1. 선거 결과 및 분석
2. 선거 주요 쟁점
3.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함.
 -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끌던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산불 사태 대처 부실, 2021년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 2022년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등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재집권에 실패함.
 - 반면 노동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는 동시에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하는 등 2019년 총선 전략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창출에 성공함.
 - 이번 총선의 주요 쟁점은 '생계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로, 노동당은 자유국민연합 집권기간 동안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움.
 -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내세운 무소속 및 녹색당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노동당도 자유국민연합에 비해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계획을 발표함.
- ▶ 신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전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새 정부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알바니즈 총리의 선거 기간 유세 발언과 퀴드 정상회담 발언을 종합하면 호주의 대중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50억 호주달러(106억 미국달러) 규모의 국가재건기금을 통해 호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신정부에서도 한·호주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한·호주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국과 호주 신정부 간의 긴밀한 대화가 요구됨.
 - 한국과 호주는 2021년 12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탄소중립 기술 이행 계획 및 청정수소 경제협력 MOU,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정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기존에 협의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호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신재생에너지, 광업·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1. 선거 결과 및 분석

■ 2022년 5월 21일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노동당 대표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음.

- 2022년 총선은 하원 151석 전 석과 상원 76석 중 40석에 대한 선거로 치러짐.
- 노동당은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며, 2013년 이후 9년 만에 노동당 정부를 구성함.
- 자유국민연합은 2019년 대비 다수의 의석을 잃으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함.
-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녹색당은 전국 득표율에서 11% 이상을 기록하며 2019년 선거 대비 약 1.3%p 상승함.
- 노동당의 상원 내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함.¹⁾

표 1. 호주 하원의회 구성

정당	의석 (변동)	비중 (%)
자유국민연합 (Liberal-National Coalition)	57 (-20)	37.7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76 (+8)	50.3
무소속 (Independent)	10 (+7)	6.6
녹색당 (The Greens)	4 (+3)	2.7
기타 정당	2 (0)	1.3
미정	2	1.3
합계	151	100.0

주: 의석 변동은 2019년 총선 결과 기준.
자료: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표율 80.3% 상황의 결과임.

표 2. 호주 상원의회 구성

정당	의석 (변동)	비중 (%)
자유국민연합 (Liberal-National Coalition)	30 (-5)	39.5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22 (-3)	28.9
녹색당 (The Greens)	9 (0)	11.8
기타 정당 및 무소속	2 (-4)	2.6
미정	13	17.1
합계	76	100.0

주: 의석 변동은 2019년 총선 결과 기준.
자료: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개표율 74.7% 상황의 결과임.

■ 2019년에 이어 선거 승리를 노렸던 자유국민연합은 국내외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인해 재집권에 실패함.

- 2019년 12월 산불 사태 대처 미흡 및 2021년 3월 정치권 성추문 스캔들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함.
 - 호주 산불 당시 모리슨 전 총리가 미국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낸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음.
 -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해임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대정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줌.²⁾

1) 호주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2) Bloomberg(2022. 4. 28), "Women Fed Up With Flagrant Sexism Could Swing Australia's Electi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4-27/australia-pm-scott-morrison-loses-female-support-before-federal-election>(검색일: 2022. 5. 20).

- 코로나19 방역 대처와 2022년 4월 체결한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도 모리슨 정부의 재집권에 악재로 작용했음.
 - o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호주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2021년 6월부터 약 3달간 주요 도시에 봉쇄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는 불안정했던 백신 수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음.³⁾
 - o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체결한 안보협정은 중국군의 남태평양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리슨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론을 부각시켰음.

■ 노동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라는 선거 슬로건을 바탕으로 2019년 총선 전략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창출에 성공함.

- 노동당의 선거 슬로건이 코로나19, 미·중 갈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은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⁴⁾
-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급진적인 정책 제안을 자제하는 전략을 취했음.
 - o 2019년 총선 당시 노동당은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주주배당금 세제혜택 폐지,⁵⁾ 급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영향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였음.
- 또한 노동당은 2019년 총선에서 미진했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⁶⁾

■ 알바니즈 총리는 2013년 케빈 러드(Kevin Rudd) 내각에서 부총리를 지냈으며, 2019년부터 노동당 대표를 맡아왔음.

- 알바니즈는 33세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노동당 내에서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음.
 - o 정치권 입문 초기 이민자 권리 보호, 무료 의료 시스템 등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음.
- 케빈 러드와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내각에서 인프라 및 교통 장관을 지냈으며, 2013년 노동당의 총선 패배 직전 10주간 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음.
- 2019년 노동당의 총선 패배 이후 단독출마로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중도 좌파로 선회함.⁷⁾

3) The Guardian(2018. 7. 5), “Guardian Essential poll: Scott Morrison approval drops six points during latest Covid lockdown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1/jul/06/guardian-essential-poll-scott-morrison-approval-drops-six-points-during-latest-covid-lockdowns>(검색일: 2022. 5. 18).

4) The Sydney Morning Herald(2021. 12. 5), “Albanese channels Labor legend with A Better Future campaign,”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albanese-channels-labor-legend-with-a-better-future-campaign-20211205-p59ezf.html>(검색일: 2022. 5. 18).

5) Crikey(2019. 5. 21), “How the Coalition played a long game to win the franking credits debate,” <https://www.crikey.com.au/2019/05/21/franking-credits-victory-election/>(검색일: 2022. 5. 19).

6) Crikey(2021. 5. 17), “Labor’s Facebook spend is far bigger than the Coalition’s — and it’s going negative,” <https://www.crikey.com.au/2022/05/17/labors-facebook-spend-far-bigger-than-coalitions-going-negative/>(검색일: 2022. 5. 20).

7) BBC(2022. 5. 3), “Anthony Albanese: The challenger vying to be Australia’s PM,”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61267489>(검색일: 2022. 5. 20).

글상자 1. 호주 정치 및 연방선거 제도의 특징

호주는 총 6개의 주(州)와 2개의 준주(準州)로 이루어진 영국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국가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음.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의 내각책임제가 혼합된 형태임. 호주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총 76명의 상원의원은 대선거구제와 비례 투표제로 선출됨. 주(州)에서 선출된 6년 임기의 72명(6개 주×12명)과 준주(準州)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4명(2개 준주×2명)으로 구성됨. 이 중 약 절반인 40명(6개 주 72명의 절반인 36명 + 2개 준주 4명)은 3년마다 선출됨. 총 151명으로 구성된 임기 3년의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선호투표제⁸⁾로 선출되며, 하원의 다수당이 집권당이 되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됨. 1925년 총선에 의무투표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총선 투표율이 92%에 달하는 등 투표율이 높음.

자료: 서승우(2012. 6. 29), 「호주 선거제도(재외선거제도 포함)」, <https://www.gaok.or.kr/gaok/unionBbs/view.do?nttlId=5844&bbsId=B0000017&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150&date=&edate=&viewType=&type=1&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35>(검색일: 2022. 5. 9);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2008. 10. 10), “호주 정치구조의 특징과 현황,”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21554/view.do?seq=6551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검색일: 2022. 5. 9); Parliamentary Education Office 홈페이지, “How many people voted in the last election?” <https://peo.gov.au/understand-our-parliament/your-questions-on-notice/questions/how-many-people-voted-in-the-last-election>(검색일: 2022. 5. 22)를 토대로 저자 정리.

2. 선거 주요 쟁점

- [생계비 부담 완화]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21년 완만한 경제 회복세 및 낮은 실업률을 성과로 내세우며 생계비 지원 확대를 약속하였고,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높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함.
 - '생계비 부담 경감'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양당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 구입 보증금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세금환급 및 조세감면 등을 공약함.
 - '22년 5월 발표된 호주국립대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5%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제도 개선(60.1%) △국가경제 발전(54.4%) △의료비 부담 완화(53.5%)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52.8%) 순이었음.⁹⁾
 - 모리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지난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강조하며 86억 호주 달러(61억 미국달러) 규모의 생계비 지원 예산을 발표함.
 - 자유국민연합은 호주 경제성장률이 '20년 마이너스(-2.2%) 성장에서 '21년 4.7%로 반등하였고,¹⁰⁾ 실업률은 '20년 6월 7.4%로 '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2년 3월 4%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¹¹⁾한 경제실적을 강조함.

8) 선호투표제도(preferential voting)는 투표자들이 각 후보자 모두에 대해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제도임.

9) Nicholas Biddle and Matthew Gray(2022. 5. 6),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Views on policy and politics on the eve of the 2022 Federal Election,” https://csm.cass.anu.edu.au/sites/default/files/docs/2022/5/views_on_policy_and_politics_on_the_eve_of_the_2022_Federal_Election_.pdf(검색일: 2022. 5. 10).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October>(검색일: 2022. 5. 13).

- 한편 노동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원칙의 법제화를 내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함.
 - o 5월 10일 알바니즈 대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5.1%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함.
 - o 호주의 '21년 4/4분기 임금상승률은 2.3%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5%, '22년 1/4분기에는 5.1%로 크게 상승함.¹²⁾
 - o 주택가격지수는 '20년 4/4분기 149에서 '21년 4/4분기 184로 약 24% 상승함.¹³⁾
- 호주연방준비은행은 물가상승 장기화 압박 속에 총선을 앞둔 5월 초 11년 만에 0.2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0.1% → 0.35%)하였고, 이는 당시 집권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1. 호주 소비자물가 및 임금 상승률 추이(20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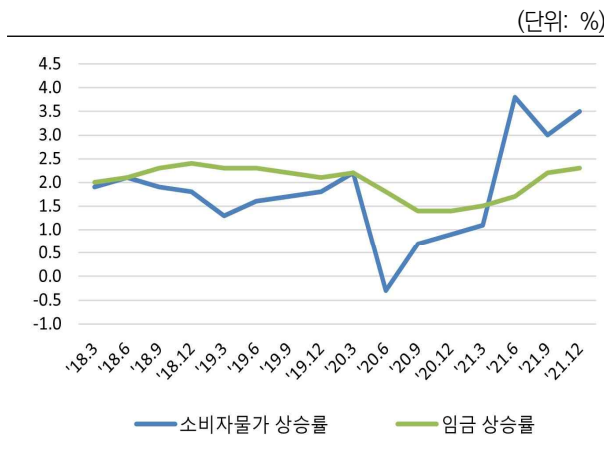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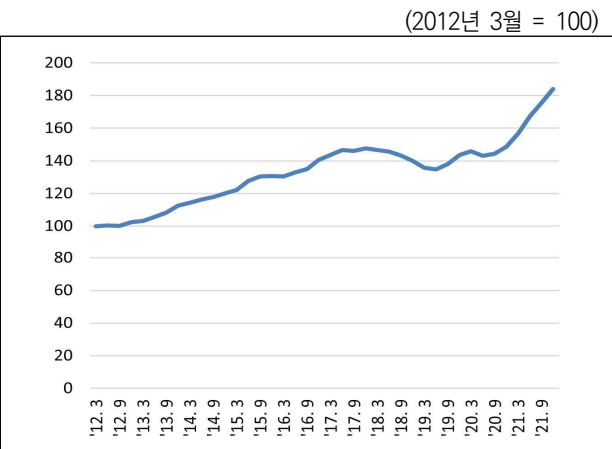


그림 2. 호주 주택가격지수 추이(2012~21)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검색일: 2022. 5. 13).

자료: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검색일: 2022. 5. 13).

■ [노인복지] 호주는 고령사회¹⁴⁾로 노인복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으며, 양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대체로 유사함.

- 자유국민연합은 191억 호주달러(135억 미국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노인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노인 가정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 주거복지시설 내 간호사 24시간 상주 △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충원 확대 △최소 일일 돌봄시간 보장 등을 약속함.
- 노동당도 당시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세웠으며, 특히 노인복지 종사자의 임금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함.
 - o 자유국민연합은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으면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¹⁵⁾

11) 호주 통계청, <https://www.abs.gov.au>(검색일: 2022. 5. 13).

12) Ibid

13) Ibid

14) 세계은행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aged)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구분하며, 호주는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비중이 16%로 고령사회임. 세계은행 DB,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OP.65UP.TO.ZS?locations=AU>(검색일: 2022. 5. 13).

■ [기후변화 대응] 지난 총선 때부터 선거의 화두로 부상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노동당이 자유국민 연합에 비해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움.

- 모리슨 전 총리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7년 전과 동일한 수준인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고, 새로운 세금 도입보다는 투자 확대와 기술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 실현을 강조했으며,¹⁶⁾ 석탄 및 천연가스 등 광업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 자유국민연합은 청정수소 개발,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을 위해 200억 호주달러(142억 호주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함.¹⁷⁾
- 한편 노동당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탄소배출 제로 등에 여당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움.
 - 노동당은 관리·감독이 부실한 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¹⁸⁾ 제도의 탄소배출 제한 기준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전기차 구입 보조금 및 충전소 설립 지원, 지역사회 내 전력보급 확대를 위한 배터리 설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기존 전력망 고도화 등을 공약함.¹⁹⁾

■ [국방/안보 정책] 실질적으로 양당간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양당 모두 중국의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안보 동맹체제 및 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태평양 도서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공약을 내세움.

- 양당 모두 중국이 인프라 투자, 대외 원조 등을 앞세워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며 호주의 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강조함.
 - 지난 4월 중국-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²⁰⁾ 보도로 인해 집권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모리슨 총리는 동맹국과 솔로몬제도 내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
 - 지난 3월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당시 집권당인 자유국민연합이 추진한 ‘국방비 예산 확대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지했으며, 방위비 예산이 GDP의 2%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함.²¹⁾
- 아울러 양당 모두 쿼드(Quad) 및 새로운 안보 협력체제인 오키우스(AUKUS) 등 인도-태평양 내 동맹·파트너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함.

15) The Guardian(2022. 4. 1), “Coalition would support aged care wage rises, but can’t say who would pay,”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2/apr/01/coalition-would-support-aged-care-wage-rises-but-cant-say-who-would-pay>(검색일: 2022. 5. 12).

16) The Guardian(2021. 10. 26), “Australia commits to 2050 net zero emissions plan but with no detail and no modelling,”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2/apr/01/coalition-would-support-aged-care-wage-rises-but-cant-say-who-would-pay>(검색일: 2022. 5. 16).

17) ABC News(2021. 11. 15), “Government releases modelling underpinn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target,” <https://www.abc.net.au/news/2021-11-12/government-releases-net-zero-2050-modelling/100616636>(검색일: 2022. 5. 17).

18) 2012년 노동당 집권 당시 탄소세가 도입되었으나 정권 교체 후 2014년에 폐지되었음. 2016년 탄소배출 제한 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치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 크레딧을 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제도가 도입됨.

19) ABC News(2021. 12. 3), “Labor announces 2030 emissions reductions target,” <https://www.abc.net.au/news/2021-12-03/labor-announces-2030-emissions-reductions-target/100671512>(검색일: 2022. 5. 17).

20) 중국은 2022년 4월 19일 솔로몬제도와외의 안보협정 체결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 보급 및 연료 교체를 위한 중국 선적(해군 군함 포함)의 솔로몬제도 부두 시설 이용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군·경찰 파견 요청 가능 △자연재해 피해 시 중국 지원 가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21) Lowy Institute(2022. 3. 10), “An Address by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https://www.lowyinstitute.org/publications/address-opposition-leader-anthony-albanese>(검색일: 2022. 5. 23).

- 다만 자유국민연합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보다 강조한 반면, 노동당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원조 지원 확대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²²⁾

표 3. 양당의 주요 공약 비교

주요 분야	자유국민연합(Liberal-National)	호주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경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3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보증금 지원 - 지역사회 내 거주 확대를 위해 신축주택 구입비용 지원 - 한부모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주택 보증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만 명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간 13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지역사회 내 45만 개 창출) - 실업률 4% 이하 달성 - 80만 개의 새로운 기술훈련 제공을 위해 37억 달러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6개 중 5개는 지역사회 내)을 위해 740억 달러 지원 - 구직자 대상 무상 기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기업-정부-노동조합-교육기관 간 기술훈련 매칭 기구 설립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인상 - '동일 노동,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법제화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6개월간 유류세 50% 인하 - 1,000만 명 이상의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20달러의 일회성 세금환급 - '22~'23년 1,200만 명 이상 납세자의 조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만 명 이상 납세자의 세금감면 - '22년 중저소득층 대상 420달러의 세금 환급
노인복지/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까지 약 23만 명의 노인에게 가정돌봄 서비스 확대 및 28만 개 시설 제공 -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지속가능성 향상, 인력 충원 - 노인 주거복지시설 내 간호사 24시간 상주 및 최소 일일 돌봄시간 보장 - 약제비 급여 확대, 약제비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주거복지시설 내 간호사 24시간 상주, 최소 일일 돌봄시간 보장 - 노인복지 종사자 임금인상 - 노인복지시설의 회계감사 강화 - 최소 50개의 공공 응급병원 도입 - 약제비 인하 - 지역사회 내 의사 채용 확대 법안 마련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 - 폐기물 수출국에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관련 일자리 1만 개 창출 - 주요 수력발전 프로젝트 투자 지속 - 그린뱅크 설립으로 100억 달러 투자 유치 - 주요 수소 허브 구축에 1억 4,000만 달러 투자 - 탄소배출 저감 위한 탄소포집 및 저장 허브 구축 투자 - 주요 광물자원 발굴 프로젝트 투자 - 새로운 천연가스전 개발 및 광물 발굴 - 주요 광물 및 희토류의 탐사·발굴·생산·가공 단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 - 그린 금속(철강, 알루미늄 등) 생산, 수소 전해조(hydrogen electrolyzer) 개발, 농업 메탄가스 및 폐기물 감소 등에 최대 3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호주 전 지역 주택에 태양광 설치 지원 -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배터리 설치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 -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및 충전소 설립 	
국방/안보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력 강화 - '22년 국방비 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 - 사이버·해상국경·태평양 지역안보 강화 - 주요 동맹 및 AUKUS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력 강화 - 사이버 안보 회복탄력성 강화 -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ODA 지원 - 퀴드, AUKUS 협력 강화 	

주: '달러'는 '호주달러'를 의미함.

자료: Sydney Morning Herald(2022. 5. 10), "The key election issues - and where the major parties stand," <https://www.smh.com.au/politics/federal/eight-key-issues-and-where-the-parties-stand-20220405-p5ab3y.html>(검색일: 2022. 5. 10); 자유당 홈페이지, <https://www.liberal.org.au>(검색일: 2022. 5. 12); 노동당 홈페이지, <https://www.alp.org.au>(검색일: 2022. 5. 1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22) Oxford Analytica(2022. 5. 10), "Australia election produces South Pacific rethink"(검색일: 2022. 5. 11).

3.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 [외교 정책] 새 정부의 대중·대미 외교정책은 이전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호·중 무역 갈등으로 대중국 강경기조의 정책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호·중 수교 50주년인 올해 말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있음.
 - 알바니즈 총리는 선거 유세 발언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쿼드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대호주 무역제재 정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음.²³⁾
 -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알바니즈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호주 내 대중 정서를 고려할 때 양국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새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호주와 미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 협력하기를 희망했음.
 -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의 정권 교체가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쿼드 회원국인 미국, 일본,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함.²⁴⁾
 - 또한 새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호주-인도네시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2019년 알바니즈는 노동당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방문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바 있으며, 2022년 총선 유세 중 선거 승리 이후 인도네시아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음.
 -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은 알바니즈 총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새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국민의 호주 내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함.
- [경제정책]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예상됨.
 - 알바니즈 총리는 정부, 민간기업,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노동당 출신 밥 호크(Bob Hawke) 전 총리의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밝힘.
 -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는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시행하였으며, 호주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4월 발표된 ABC Vote Compas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

23) Reuters(2022. 5. 24), “At Quad summit, Australia’s new PM scolds China over trade tariff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s-new-labor-govt-says-china-relations-remain-challenging-2022-05-24/>(검색일: 2022. 5. 25).

24) 9NEWS(2022. 5. 24), “Albanese says Australia will ‘strengthen’ US alliance in first meeting with Biden,” <https://www.9news.com.au/national/federal-election-2022-australia-prime-minister-anthony-albanese-touches-down-in-tokyo-for-quad-dialogue-with-us-japan-and-india/eceeb10a-587e-4b61-b5c7-2a58b6640a9d>(검색일: 2022. 5. 25).

비 부담 완화를 언급한 비율이 2016년과 2019년 선거에서 각각 3%, 4%인 데 비해 2022년 선거에서는 13%를 기록했다.²⁵⁾

- 호주는 2022년 3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1년 이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했으며, 호주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2022년 하반기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시행이 요구됨.²⁶⁾
- 한편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150억 호주달러(107억 미국달러) 규모의 국가재건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료 산업, 광업 및 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농수산업에 투자될 예정임.

■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후변화 대응이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였던 만큼, 기존 자유국민연합 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선거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무소속과 녹색당 후보의 약진으로 이어진 만큼²⁷⁾ 새 정부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도시(멜버른, 시드니) 선거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들은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비판해왔음.
- 노동당은 기존 자유국민연합 정부와 비교해 진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약속했으나, 녹색당은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노동당의 2050년 목표 도달 시점보다 더 이른 시일 내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로 인해 단기적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산업과 노동자들의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1년 12월 한국과 호주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새 정부하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호주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대하여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 왔으며, 한국은 '한-호주 아세안 정책 대화'를 통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알바니즈 총리는 당대표 시절인 2021년 12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

25) ABC News(2022. 4. 22), "Vote Compass data shows climate change, cost of living and the economy are the big election issues, but voters still split along party lines," <https://www.abc.net.au/news/2022-04-22/vote-compass-federal-election-issues-data-climate-change-economy/101002116>(검색일: 2022. 5. 21).

26) Reserve Bank of Australia(2022. 5. 5),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May 2022,"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2/may/pdf/statement-on-monetary-policy-2022-05.pdf>(검색일: 2022. 5. 22).

27) BBC News(2022. 5. 22), "Australia election: Anthony Albanese signals climate policy change,"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61539426>(검색일: 2022. 5. 23).

며, 퀴드 정상회의 공동성명²⁸⁾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밝힘.

- 한국의 새 정부 또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호주 협력 기회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한국과 호주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국 신정부간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호주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이 재편되는 구도에서 자원 강국인 호주와 에너지 산업 기술강국인 한국은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히며,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고도화가 기대됨.
- 호주는 2022년 핵심광물 전략 보고서(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와 국가 수소 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2021년 양국 정부는 탄소 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 경제협력 MOU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며 양국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호주 신정부가 국가재건기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료 산업, 광업 및 희토류 기술 개발, 첨단 제조업 분야를 육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EP**

28) Prime Minister of Australia(2022. 5. 24),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https://www.pm.gov.au/media/quad-joint-leaders-statement>(검색일: 2022. 5. 25).